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발의연월일 : 2021. 6. .

발 의 자 : 이제승 의원 외 명

1. 주 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 세계적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심각한 재난을 불러올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함.
- 방사성 오염수는 우리나라 해양뿐만아니라 전 해양,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그 피해는 미래세대까지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
- 이에 부평구의회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첨부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 송부처 :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 국회(대한민국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방사능 물질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된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화작업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상당량의 위험 물질이 모두 걸러졌다는 보장도 없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하게 처리되었다면,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소비하면 될 일이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이며,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의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오염수 방출을 강행처리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인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는 만행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방사성 오염수는 우리나라 해양뿐만 아니라 전 해양,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피해는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즉시 철회되어야만 한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의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